

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

- 환경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해결 기대

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‘환경분쟁 조정법’ 등 6개 환경법안이 2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먼저, ‘환경분쟁 조정법’을 비롯한 5개 연계법률* 개정을 통해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과 피해구제,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등의 구제제도가 ‘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’(기존 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’에서 명칭 변경(‘25.1.1~))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. 법률 제명도 개정취지에 부합도록 ‘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’로 변경됐다.

* 환경보건법, 석면피해구제법,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,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, 환경정책기본법

그간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이 환경피해 조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환경오염피해·석면·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선 환경부,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*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. 이번 법률 개정으로 ‘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’에 한 번의 신청만으로 환경피해를 일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* (신청·조사기관) ▲ 피해구제 : 환경부, 한국환경산업기술원(단, 석면피해 신청은 지자체), ▲ 분쟁조정 :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, ▲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: 환경부, 국립환경과학원

한편, ‘환경보건법’ 개정으로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보건 취약계층에게 보다 다양한 환경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.

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.

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. 끝.

담당 부서	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마루 (044-201-6390)
		담당자	사무관	노원택 (044-201-6399)



연번	법안명	주요 개정내용	기대효과	시행일	담당자 (연락처: 044-201-****)
1	환경분쟁 조정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환경보건법’에 따른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와 ‘석면피해구제법’에 따른 석면피해구제, ‘환경오염피해구제법’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, ‘화학제품안전법’에 따른 살생물제 피해구제를 현 ‘환경분쟁조정위원회’로 일원화 ○ 법률 제명을 ‘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’로 변경 ○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‘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위원회’로 변경 ○ 업무 이관에 따른 분과위원회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,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 ○ 환경피해에 대한 구제 심의·결정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‘환경분쟁 조정피해구제위원회’로 변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오염 피해구제와 분쟁조정 제도 등 각 기관별, 법률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후구제 제도를 통합·일원화하여 국민의 구제 편의성 제고 기대 	‘25.1.1	<p>환경보건정책과 김지영 과장(6750) 김경숙 사무관(6760)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지형 사무국장(7940) 장정호 사무관(7955)</p>
2	석면피해구제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석면피해 구제업무의 ‘환경분쟁 조정법’ 이관에 따라 석면피해판정위원회,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,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를 폐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석면피해 사후구제 제도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·일원화하여 국민의 구제 편의성 제고 기대 	‘25.1.1	<p>환경피해구제과 서민아 과장(6810) 이준한 사무관(6818)</p>

연 번	법안명	주요 개정내용	기대효과	시행일	담당자 (연락처: 044-201-****)
		○ 석면피해구제급여의 지급결정 및 일시 중지 등의 결정 주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			
3	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오염피해구제 업무의 이관에 따라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를 폐지하되,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·의결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건위원회로 이관 ○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제한 등의 주체를 환경부장관에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하고,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 및 구제급여심사위원회를 폐지 	○ 환경오염피해 사후구제 제도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·일원화하여 국민의 구제편의성 제고 기대	'25.1.1	환경피해구제과 서민아 과장(6810) 최재석 사무관(6813)
4	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신청접수·조사지급 결정, 재심사청구 등의 주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변경 ○ 미승인 살생물제품 및 처리제품의 제조·수입 경과조치 종료 후 시장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(기한 종료 후 6개월 이내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살생물제품 피해 사후구제 제도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·일원화하여 국민의 구제편의성 제고 기대 ○ 미승인 살생물제품 등에 대한 시장 회수 및 최종 퇴출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로 제도 실효성 제고 기대 	'25.1.1 공포한 날	환경피해구제과 서민아 과장(6810) 최재석 사무관(6813) 화학제품관리과 권병철 과장(6805) 김용근 사무관(6806)

연 번	법안명	주요 개정내용	기대효과	시행일	담당자 (연락처: 044-201-****)
5	환경정책기본법	○ 환경오염 또는 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 시책 마련 시 건강피해 조사, 환경분쟁 조정 및 구제와 연계 근거 마련	○ 환경오염 피해에 따른 구제 시책에 대해 분쟁조정 등의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기대	'25.1.1	환경피해구제과 서민아 과장(6810) 고나단 사무관(6815)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지형 사무국장(7940) 장정호 사무관(7955)
6	환경보건법	○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제도 기능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이관	○ 환경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기능 일원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 기능을 이관하여 업무 효율성 제고 기대	'25.1.1	환경피해구제과 서민아 과장(6810) 고나단 사무관(6815)
		○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와 수행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 ○ 환경유해인자 노출 우려가 있는 어린이용품을 고시로 규정하고 기존 법률에 규정된 타부처 소관 용품(일회용기저귀, 물휴지) 삭제	○ 이용권 발급 및 온라인 절차화 등 환경보건지원사업 효율화를 통해 지원신청을 위한 시간과 비용, 절약 기대	공포 후 6개월	환경보건정책과 김지영 과장(6750) 이은혜 사무관(6762) 남경임 사무관(6754)